

신산업의 지역불균등 발전과 경로의존 경향 : 1990-2010년¹⁾

김영정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난 반세기 가까이 진행된 지역불균등발전의 실태와 경로를 파악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해 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날의 추이(경로의존)가 강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뒤집는 변화(경로창조)가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있는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격차의 질적 변화의 특징과 미래의 추세를 예견해 보려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만약 분석을 통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탈피한 반전의 추이가 읽혀지거나, 그러한 단서들이 발견된다면 미래의 지역발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지역(지방)이 이미 ‘새로운 발전경로의 창조(path creation)’를 통해 특화된 지역발전의 길(path)을 여는데 성공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추세 역전의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채 기존 경로가 강화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미래의 격차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절차를 밟는다.

첫째,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지역 간 불균등발전의 추이를 살핀다. 이를 위해 1960-2010년 까지의 권역별 GRDP(지역총생산) 상대적 규모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도한다. 1985년 이후 상황은 정부공식통계, 그 이전의 실태는 비공식 자료를 이용한다.²⁾

둘째, 권역별 산업부문별 GRDP 규모 추세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산업화 시대(1970-1980년대) 이후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차이보다는 광공업(제조업) 부문의 성장 또는 지체에 따른 지역별 생산력의 차이로부터 지역 간 성장의 단층현상이 깊어 갔다는 역사적 경로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산업구조 고도화 시기(1990년대 이후)의 공간 불균등은 제조업 분야 중 특히 신산업 분야의 지역 간 불균등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지역발전의 경로의존 또는 창조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곧 살펴보게 되듯이 지역발전경로는 지역산업발전의 역사성, 학습, 기술, 상황적 우연성 등 매우 복잡한 개념적 현상을 통해 설명되고 평가된다. 실제로 이런 요인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여 지역산업구조의 토대를 형성하고, 변화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우선 지역별

1) 본 연구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기존연구(김영정, 2009)를 바탕으로 이후의 정부통계 업데이트 자료에 기초하여 추가, 보완되었음을 밝힘

2) 현재 매년 발표되고 있는 16개 광역지자체별 GRDP 규모가 국가공식통계로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이다. 지역 간의 엄청난 불균등발전 실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와 지역감정 해소에 역행한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당시 만만치 않은 반대에 직면했지만 정부는 1985년의 실태부터 과감하게 소급 발표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큰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후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이 기초지자체별 GRDP 통계 작성 및 발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다.

산업부문별 내부구성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불균등발전이 전적으로 광공업(제조업)부분의 내부구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생산력의 격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제조업 내부구성의 지역별, 시기별 변화추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1980년 이후의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총액의 지역별 추이 변화를 분석하고 어느 지역이 중앙정부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업종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경로의존경향(또는 창조경향)을 읽어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제조업 내부 구성의 분석과 관련하여, 특히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이끌고 있는 신산업 부분 - 특히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종, (2)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종, (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 등 - 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집중 조명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산업 분야의 지역 간 내부구성 변화를 집중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조정 정책이 없이는 지역불균등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신산업 업종의 역량강화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핵심내용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지역발전의 경로의존 및 창조경향을 확인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들 신산업 업종의 지역배열에 대한 분석이 절대 필요하다.

2. 분석을 위한 개념틀 : 지역발전의 ‘경로의존성과 창조성’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에 대한 통일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개념은 특정 사회현상의 구성 및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 그 현상의 역사적 출현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역사 중요성의 명제”(Die History Matters These)와 그러한 역사 과정에서 비효율적 발전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진화 실패의 명제”(Die These eines Evolutionsversagens)를 전제로 성립한다(박영수, 2007: 29).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사회(정치, 행정, 경제) 현상은 과거에 결정한 선택(행동, 정책, 결정 등)의 유산이며 미래의 현실이 구현되는 환경을 구성한다는 점과 그러한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틀이 바로 ‘경로의존성’이다.

경로의존성을 지역발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구로 활용하고자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박종화(2009: 240-241)는 그것을 물리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산업구조, 산업분포, 정치적 인프라 등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는 부존자원, 자본장비 등을 이르며, 사회적 인프라는 사회, 경제, 문화적 제도 및 전통을 이른다. 산업구조는 지역주도산업과 관련된 지역혁신체계의 존재 여부를 뜻하고, 산업분포는 해당 지역의 산업집적도 및 네트워크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인프라는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정책 결정과정의 토대를 결정하는 정치과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정책노선 및 지방정부와 관계, 지방정부 사이의 역학관계, 지방내부의 정치적 레짐(political regime)의 존재형태와 이해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발전은 경로의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로의 창출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지역단위에서의 새로운 발전경로 창조는 ‘입지적 기회의 창(a window of locational opportun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것은 기존 구도의 압력이 약화되고 상당기간 동안 입지적 자유의 순간을 향유하게 될 때 새로운 업종(산업)이 해당 지역에 착종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적 맥락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경로창조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종화, 2009: 250).

일반적으로 지역(또는 도시)의 성장은 다양한 형태의 산업연관(집적과 네트워크)이 존재하고 그들 상호간에 유연성과 적응성이 확보될 때 보장된다. 그러한 ‘산업연관’은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고 그 중 일부가 주력산업 또는 선도산업으로 부상하여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이 보편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의 초기 도시발전은 이와 같은 자생적 산업연관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화(capitalist urbanization) 과정의 심화, 글로벌 기업의 등장,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의 스프롤 및 다중산업연관 등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20세기 중후반에 들어 이에 대한 이론적 지평은 크게 확장되었다. 생태학적 지역(도시)이론, 정치경제학적 지역(도시)이론, 신생태학적 지역(도시)이론 등 다양한 시각들이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발전문제를 다룬 연구 결과물이 지난 1980년대 중반이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³⁾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지역발전의 경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많은 경우 정태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종단분석은 소홀히 하였다. 경로분석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경로의존 및 창조와 관련된 이론적 관점을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형 국가의 지역문제를 설명하는 논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일정부분 무리가 따른다. 지역발전의 경로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방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역발전은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기초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전개되었다. 1960년대 농업 및 경공업 → 1970, 80년대 중화학공업 → 1990년대 제조업구조 고도화 정책 → 2000년대 신산업 부문의 전략적 육성정책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의 핵심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지역과 소외된 지역의 발전경로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본래 지역별 발전경로의 의존, 고착, 출생, 퇴출 등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시책이 아무리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밝힌 지역내부 요인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기로 한다.

II. 지역 간 성장격차 실태: 지역별 GRDP 규모 변화 추이

지역불균등 발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많다. 산업부문별 종사자 및 부가가치 총액의 지역별 차이, 산업부문별 내부구성의 지역별 차이, 근로자 종사상 지위의 지역별 차이, 생산 및 기업조직 규모의 지역별 차이, 신산업 배치의 지역별 차이 등이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 지역 간 성장격차를 파악하는 작업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재화 및 서비스의 규모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3)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가)자본주의 국가(capitalist state)의 계급성과 한국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특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성장격차를 설명하려는 메타이론적 설명방법, (2)정책과 투자의 지역편중과 관련하여 지원배분의 외곡 및 지역성장격차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정치경제학적 설명방식, (3)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부터 자원분배의 공간적 외곡 현상과 지역성장격차의 문제를 이해하려는 실천론적 설명 방식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김영정, 1994: 185-198; 김영정, 소순열 외, 2006: 29-36).

있는 지역총생산(GRDP)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불균등발전의 상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발전의 경로의존 경향을 파악키 위해 위에 열거한 지표들을 활용키로 한다.

GRDP(또는 GRP)는 각급 행정구역 단위에서 산업부문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소득)가 창출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총량지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발생한 소득이 시도 간 이전(송금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의 주민에 귀착되는가를 나타내주는 분배소득과는 차이가 있어 행정지역간의 생활수준차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통계청, 1993: 5).

<표 1>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생산(GDP)대비 시도별 GRDP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통계치이며, <그림 1>은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들을 통해 1968-2010년 사이의 지역불균등발전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1〉 지역별 GRDP 규모 : 1968-2010년

(단위 : %)

구 분	1968년	1976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10년
서울	26.5	28.2	25.0	23.7	24.0	23.9	21.7	23.2
부산	7.6	8.8	8.4	6.7	5.9	5.9	5.6	5.1
대구	-	-	4.1	3.9	3.6	3.4	3.2	3.0
인천	-	-	4.4	5.0	4.5	4.6	4.5	4.8
광주	-	-	-	2.4	2.2	2.2	2.1	2.1
대전	-	-	-	2.2	2.3	2.3	2.3	2.2
울산	-	-	-	-	4.9	4.9	5.0	5.0
경기	9.4	12.6	12.8	17.0	19.3	20.1	21.7	20.0
강원	5.1	4.0	3.8	2.7	2.8	2.7	2.6	2.4
충북	4.4	3.7	3.8	3.3	3.4	3.3	3.3	3.1
충남	8.6	6.3	6.0	4.1	5.0	5.0	5.7	6.5
전북	6.6	5.0	4.8	3.6	3.3	3.1	3.1	3.0
전남	8.7	8.7	7.5	5.3	4.7	4.4	4.3	5.0
경북	11.9	11.1	7.1	6.7	6.7	6.8	7.4	6.7
경남	9.9	10.6	11.1	12.2	6.2	6.7	6.7	7.0
제주	1.2	0.9	1.2	1.0	0.9	0.9	0.9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인천	9.4	12.6	(17.2)	(22.0)	(23.8)	(24.7)	(26.2)	(24.8)
충남/대전	8.6	6.3	6.0	(6.3)	(7.3)	(7.3)	(8.0)	(8.7)
전남/광주	8.7	8.7	7.5	(7.7)	(6.9)	(6.6)	(6.4)	(7.1)
경북/대구	11.9	11.1	(11.2)	(10.6)	(10.3)	(10.2)	(10.6)	(9.7)
경남/부/울	(17.5)	(19.4)	(19.5)	(18.9)	(17.0)	(17.5)	(17.3)	(17.1)

주: 1) 1985년 전후의 GRP 추계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1968년과 1976년의 비율은 197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3) 2000년 이후 경남/부산의 비율은 울산을 포함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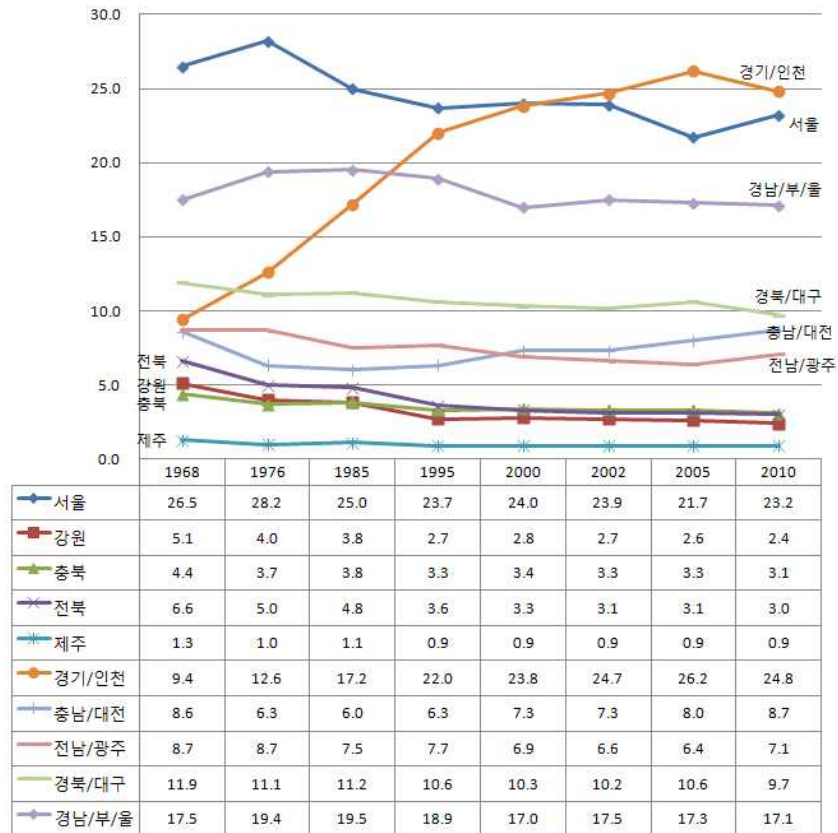
출처: 1) 1968, 76년의 경우 :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80), 김영정(1994: 174)

2) 1985년 이후의 경우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의 엄청난 GRDP 규모이다. 1968년 이후 모든 분석대상 연도에서 지역별 GRDP 총계(GDP)의 1/5을 넘어서는 높은 경제적 수위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⁴⁾ 이는 서울시 면적이 국토(남한)의 0.6%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엄청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서울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제조업 부문의 사양화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1〉 지역별 GRDP 규모변화(%)

4) 엄밀한 의미에서 GRDP의 합과 GDP는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GRDP는 시도 단위별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추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985년도 이후의 경우, 지역총생산은 국방부와 수입세 부문이 제외된 채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GRDP의 합이 GDP와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본 논문에서는 기술의 편의상 GRDP의 총합을 GDP로 표현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빠른 GRDP 성장을 달성한 지역은 경기/인천이다. 1960년 대 이후 줄곧 45도 우상향의 숨 가쁜 성장률을 달성했고, 2000년대에 들어 마침내 서울시 규모를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수도권 일극중심의 성장구도를 가져온 근간이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체 수도권의 GDP 대비 GRDP 규모는 1968년 35.9% → 1995년 45.7% → 2000년 47.8% → 2002년 48.6% → 2005년 47.9% → 2010년 48.0%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GDP의 1/2 가량이 수도권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점유율이 낮아진 것이 이채롭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정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한 곳은 영남권이다. 그 비중은 GDP 대비 3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경제생산총액의 약 80%가 수도/영남권에서 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과 영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호남, 중부, 강원, 제주)의 규모는 극히 왜소하다. 이들 세 지역이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라는 사실이 <그림 1>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퇴행적 발전 지역으로 꼽히는 전라북도의 규모는, 1960-70년대에 GDP 대비 5-6%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3%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난 추이를 지방자치제 실시 전후(1995년)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몇 가지 뚜렷한 추세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전국 대부분 지역의 GRDP 규모

가 지방자치 실시 이전보다 감소했거나 비슷한 정도를 보이지만 유독 경기도와 중부권(충남 북)의 규모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1995년 17.0%에서 2010년 20.0%로 증가함으로써 절대규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와 동등해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승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충남북의 GRDP 비중의 증가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전국 대비 7.4%에서 2010년 9.6%로 증가하였다. 충청권의 북부지역이 경제적으로 이미 수도권에 편입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셋째, 1990년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GRDP 점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전국대비 12.2%를 보였으나 2010년 7.0%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울산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그림 1>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수도권과 영남권 등 두 축을 중심으로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들 두 축의 GRDP 구성비는 1968년 GDP의 65.3%, 2010년의 경우에는 무려 74.8%에 이른다. 두 권역의 총면적이 국토의 4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우리나라 지역불균등발전의 정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추세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GRP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가공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지역별로 제시한 주민 1인당 GRDP 규모(<표 2> 참조)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주민 1인당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 볼 때, 지역 간 격차는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수준을 타 지역과 비교하면 그 격차를 보다 확실히 실감할 수 있다. 예컨대, 2010년도의 경우 강원도 주민 1인당 GRDP(1,959만원) 규모와 전라북도(1,949만원) 규모는 울산시(5,465만원)의 1/3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지역의 이러한 규모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지역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물론 이후에도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표 2>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광역도시권의 주민 1인당 GRDP 규모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시의 경우에서 그러한 경향을 뚜렷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도시의 외부지역인 경남, 경북, 전남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권의 지가상승과 환경규제 등의 요인으로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보였던 제조업 생산시설의 고도 집중경향이 약화되는 등 광역도시권의 산업 및 직업구성의 변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광역도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권역간 이전소득 및 최종 가치분소득의 수준을 GRDP는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2> 주민 1인당 GRDP 규모

(단위 : 천 원)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서울특별시	3,974	8,269	13,996	16,120	27,735
부산광역시	3,674	6,327	9,239	11,583	17,432
대구광역시	3,085	5,682	8,375	9,333	14,564
인천광역시	4,844	7,801	10,598	13,124	21,354
광주광역시	-	6,776	9,335	10,885	17,035
대전광역시	-	6,238	9,910	11,396	17,586
울산광역시	-	-	27,952	34,708	54,647
경기도	4,096	7,953	12,443	15,237	20,425
강원도	3,374	6,661	11,071	12,897	19,591
충청북도	4,177	8,481	13,311	16,365	23,961
충청남도	3,037	8,345	15,695	21,912	37,649
전라북도	3,297	6,820	10,038	12,648	19,492
전라남도	3,040	9,148	13,478	17,406	33,735
경상북도	3,624	8,969	14,109	20,671	30,120
경상남도	4,831	11,379	11,995	16,020	26,055
제주도	3,835	7,403	10,305	12,223	19,681
전국 평균	3,783	8,018	12,528	22,375	24,140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Ⅲ. 광공업(제조업) 부문의 성장격차: 지역별 부가가치 총액 차이

우리나라 고도경제성장기의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빠른 성장의 달성’ 그 자체였으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1960년 2,400억원에 불과하던 GDP 규모는 고도성장이 마무리되던 시기였던 1996년의 경우 무려 360조원에 이르러 36년 동안 약 1,600배 확장되었다. 또한 1960년 1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1인당 GNP는 1996년 850만원 수준에 이름으로써 약 860배 증가하였다(박양호, 1998: 23). 그리고 마침내 참여정부 막바지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렸다.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급격히 제조업 중심 구조로 바뀌었다. 그 실상을 <표 3>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도성장기로 일컬어지는 1966-1988년의 20여 년 동안 달성한 GDP 연평균성장률은 8.76%였다. 오늘날 중국이 달성하고 있는 기록보다 높은 수치이다. 1960년 이후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4.23%)을 기록한 80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적게는 6.13%(1979년), 높게는 13.78%(1973년)에 이르는 가공할만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달성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보다 상징적이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1.52%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연도는 1970년(-1.77%)과 1980년(-0.14%) 등 두 해 뿐이며, 그 밖의 모든 연도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특히 1973년에는 전년도 대비 30.03%라는 전대미문의 성장률을 보였고, 15%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경우만 하더라도 1972, 1976, 1984, 1986년 등 네 개 연도에 달한다. 이렇듯 빠른 압축적 성장 과정은 국민경제의 총량적 규모를 크게 늘려 놓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높여 놓았다(김영정, 1994: 161-162).

<표 3> 한국 고도경제성장기의 산업구조: 1966-1988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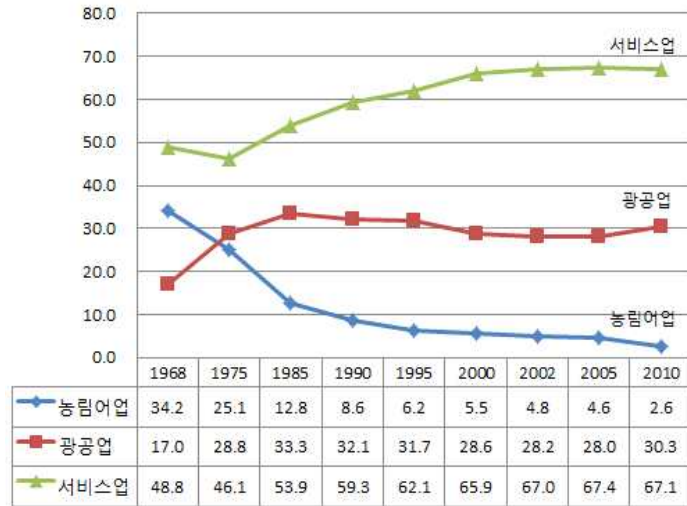
	연평균성장률	표준편차	최대성장치	최소성장치
국내총생산	8.76	3.87	13.78	-4.23
제조업총생산	11.52	7.26	30.03	-1.77
농업총생산	3.76	8.00	14.43	-24.91

주: 모든 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보정한 순증가율임.

출처: 김영정(1994: 161).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는 1980년대 중반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그 목표는 선진형 경제구조로의 체질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GDP 대비 산업 부문별 총생산 구성비를 대비시킨 <그림 2>에서 보듯이 광공업 부문 총생산 규모의 비중이 크게 증가(1968년 17.0% → 2010년 36.6%)했으나, 농림어업 부문은 급감(34.2% → 2.6%)하고 있는 사실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두 부문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서비스업의 성장은 보다 놀랍다. 그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8.8%에서 60.8%로 증가했다. 산업별 생산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고도경제성장기에 고착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GDP 대비 산업부문별 총생산 구성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지역불균등발전은 상당부분 지역 간 광공업(제조업) 부문 생산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 부문 규모의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광공업부문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예컨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전북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경기 및 경남(울산)의 광공업부문 생산규모와 전북의 그것과는 지속적으로 5-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나, 농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차이가 크지 않고 그 폭도 감소하였다. 그 동안의 지역격차가 주로 광공업부문 생산규모의 차이로부터 유발된 것임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격차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역별 광공업(제조업) 부문의 특성-부가가치, 내부구성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968-2010년간 제조업부문 지역별 부가가치 총액을 살펴본 것이 <표 4>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사실들이 발견된다.

우선, 수도권, 영남권의 과대집중 경향과 호남 및 중부권의 과소화 경향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영남권의 비중은 1968-2010년간 중부/호남권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

둘째, 사업체수 비중과는 달리 영남권의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이 수도권의 규모에 버금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2010년 경우 수도권 업체수의 전국 대비 비중(50.4%)은 영남권(31.3%)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부가가치 총생산액의 비중은 2005년도 각각 38.0%와 37.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도에는 영남권(37.1%)이 수도권(34.1%)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1995년도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총액의 지역분포를 제시한 <표 6>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야닌 중화학공업의 집적도가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신산업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비율

(단위 : %)

지역	1968년	1978년	1988년	1992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10년
전국	100.0 (301)	100.0 (8,192)	100.0 (48,341)	100.0 (96018)	100.0 (160,692)	100.0 (221,859)	100.0 (242,299)	100.0 (312,791)	100.0 (435,344)
서울	33.2	21.7	13.1	10.0	8.6	6.8	7.3	5.8	3.4
부산	14.9	12.6	7.6	6.2	4.9	3.9	3.8	3.4	3.2
대구	-	-	4.2	3.6	3.8	2.7	2.6	2.4	1.8
인천	-	-	7.6	7.9	7.3	5.6	5.4	4.8	4.4
광주	-	-	2.1	1.7	1.7	2.1	1.9	2.0	2.0
대전	-	-	2.4	1.9	1.5	1.6	1.5	1.4	1.2
울산	-	-	-	-	-	11.3	10.3	9.3	9.2
경기	11.3	24.4	25.2	25.2	28.5	27.5	27.5	27.4	26.3
강원	2.6	1.1	1.6	1.6	1.7	1.4	1.2	1.2	0.8
충북	3.1	2.0	3.1	3.9	5.4	4.3	4.5	4.3	4.3
충남	6.3	4.4	1.6	3.2	4.1	6.0	6.9	8.1	12.0
전북	3.8	2.6	2.5	2.8	2.6	2.6	2.6	2.5	2.7
전남	3.7	4.8	2.8	4.6	4.7	4.3	4.2	5.1	5.7
경북	8.2	11.5	9.3	8.8	7.9	10.6	11.2	13.2	12.3
경남	12.5	14.8	16.8	18.5	17.4	9.3	8.9	9.0	10.6
제주	0.3	0.1	0.1	0.1	0.1	0.1	0.1	0.1	0.1
수도권	44.5	46.1	45.9	43.1	44.4	40.0	40.1	38.0	34.1
영남권	35.6	38.9	37.9	37.1	34.0	37.7	36.9	37.3	37.1
호남권	7.5	7.4	7.4	9.1	8.9	9.0	8.7	9.6	10.4
중부권	12.0	7.5	8.7	10.5	12.6	13.2	14.1	15.0	18.3

주 :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중부권-대전, 강원, 충북, 충남.

2) 2000년의 경우는 2001년 통계치를 활용 산출함

3) ()의 수치는 지역별 부가가치 실계(단위: 10억 원).

출처: 1) 1992년 이전. 통계청(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각 년도.

2) 1995년 이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에서 재계산.

셋째, 호남권과 중부권의 추이 변동이 주목된다. 60-8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두 권역 비중의 정체 현상이 90년대 이후에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호남 및 중부권 지역의 산업재편 또는 재구조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 볼 일이다.

〈그림 3〉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의 권역별 비중(%)



넷째, 부가가치 총액을 전국의 16개 시도별로 비교해 볼 때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경북, 충남, 경남, 울산, 전남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비중(2010년 경우 26.3%)은 놀랄 만하다(〈표 4〉참조). 고도경제성장기의 추세를 이어받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고 있다. 또한 충남의 성장률 추세도 주목할 만하다. 충남 지역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경남지역을 앞서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부권에 위치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반도체, LCD 및 영상음향, 통신기기 등의 IT제조업의 성장과 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울산시를 제외한 대도시권역에서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앞에서 서울시 사례에서 설명했듯이, 대도시권의 산업구조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IV. 지역성장 격차의 유발요인: 제조업 내부구성 차이

〈표 4〉를 통해 확인되는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지역격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업종의 지역별 차등배열 때문에 유발된 것일까? 이는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액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 〈표 5〉는 이런 필요에 따라 ‘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총액의 권역 간 격차’와 ‘부가가치총액의 권역 내 분포(괄호안의 수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통계를 분석의도에 맞게 권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5〉 제조업 중분류별 부가가치 총액의 권역간(권역내) 변화 추이

(단위 : %)

	1983년					1992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계	100.0 (100.0)	43.0 (100.0)	40.3 (100.0)	8.0 (100.0)	8.7 (100.0)	100.0 (100.0)	43.1 (100.0)	37.1 (100.0)	9.1 (100.0)	10.5 (100.0)	100.0 (100.0)	39.8 (100.0)	37.7 (100.0)	8.6 (100.0)	13.9 (100.0)	100.0 (100.0)	38.2 (100.0)	37.3 (100.0)	9.6 (100.0)	14.9 (100.0)	100.0 (100.0)	34.2 (100.0)	37.1 (100.0)	10.3 (100.0)	18.3 (100.0)
업종1	100.0 (15.8)	38.0 (14.0)	22.8 (9.0)	17.7 (35.9)	21.5 (38.6)	100.0 (10.6)	36.9 (11.4)	20.4 (5.8)	16.3 (28.5)	26.4 (16.5)	100.0 (7.3)	42.2 (7.6)	21.8 (4.3)	11.7 (10.0)	24.2 (12.8)	100.0 (6.2)	36.9 (6.0)	20.6 (3.4)	14.0 (9.1)	28.5 (11.9)	100.0 (5.3)	34.0 (5.3)	20.9 (3.0)	12.2 (6.3)	31.8 (9.2)
업종2	100.0 (16.6)	42.6 (16.5)	44.3 (18.3)	4.8 (10.1)	8.3 (15.7)	100.0 (13.3)	42.2 (16.5)	45.3 (16.3)	5.7 (8.3)	6.8 (8.6)	100.0 (7.1)	54.4 (9.6)	35.2 (6.7)	3.9 (3.2)	6.5 (3.3)	100.0 (5.3)	61.3 (8.5)	30.1 (4.3)	3.1 (1.7)	5.4 (1.9)	100.0 (3.9)	64.2 (7.3)	27.5 (2.9)	2.9 (1.1)	5.4 (1.2)
업종3	100.0 (1.8)	63.1 (2.6)	25.0 (1.1)	8.9 (0.5)	3.0 (0.6)	100.0 (0.9)	59.4 (1.6)	24.8 (0.6)	9.4 (0.9)	6.4 (0.5)	100.0 (0.6)	57.9 (0.8)	22.0 (0.3)	12.8 (0.8)	7.3 (0.3)	100.0 (0.5)	55.7 (0.7)	25.5 (0.3)	11.6 (0.6)	7.2 (0.2)	100.0 (0.3)	59.8 (0.6)	21.7 (0.2)	9.6 (0.3)	8.9 (0.2)
업종4	100.0 (4.9)	67.0 (7.6)	18.2 (2.2)	5.8 (3.5)	9.0 (4.9)	100.0 (4.9)	63.2 (9.0)	15.8 (2.1)	9.9 (5.3)	11.1 (4.9)	100.0 (5.1)	66.1 (8.3)	14.6 (2.0)	6.4 (3.8)	12.9 (4.8)	100.0 (4.0)	67.6 (7.1)	14.4 (1.6)	6.0 (2.5)	12.0 (3.2)	100.0 (1.9)	51.6 (2.8)	20.5 (1.0)	7.2 (1.3)	19.5 (2.0)
업종5	100.0 (18.5)	39.6 (17.0)	39.5 (18.1)	16.1 (37.1)	4.8 (10.1)	100.0 (16.8)	35.8 (17.7)	32.9 (35.5)	17.4 (37.4)	13.9 (22.3)	100.0 (16.5)	29.7 (12.1)	33.6 (14.9)	17.0 (32.6)	19.7 (23.4)	100.0 (17.0)	25.6 (11.4)	35.6 (16.2)	19.7 (34.8)	19.1 (21.7)	100.0 (15.7)	22.8 (10.4)	31.5 (13.3)	25.8 (39.2)	19.9 (17.0)
업종6	100.0 (4.9)	36.2 (4.1)	23.6 (2.9)	8.8 (5.3)	31.4 (17.6)	100.0 (5.7)	33.2 (4.1)	26.2 (2.9)	11.8 (5.3)	28.8 (17.6)	100.0 (4.0)	26.3 (2.6)	28.5 (3.1)	14.2 (6.6)	31.0 (9.0)	100.0 (3.4)	23.7 (2.1)	26.1 (2.4)	12.6 (4.5)	37.7 (8.6)	100.0 (3.4)	19.7 (2.0)	22.8 (2.1)	8.8 (2.9)	48.3 (9.0)
업종7	100.0 (8.1)	20.7 (3.9)	76.9 (15.5)	0.4 (0.4)	2.0 (1.8)	100.0 (7.4)	23.3 (3.9)	53.5 (15.5)	20.2 (0.4)	3.0 (1.8)	100.0 (6.6)	18.1 (2.9)	55.0 (9.7)	19.5 (14.9)	7.4 (3.5)	100.0 (8.2)	20.4 (4.4)	50.1 (10.9)	22.2 (18.9)	7.2 (4.0)	100.0 (7.6)	17.3 (3.8)	49.4 (10.1)	20.2 (14.8)	13.1 (5.4)
업종8	100.0 (27.4)	48.3 (30.8)	46.9 (31.9)	1.7 (5.8)	3.1 (10.0)	100.0 (37.7)	47.3 (32.4)	43.3 (44.0)	3.2 (13.0)	6.2 (26.5)	100.0 (51.1)	41.9 (53.0)	42.3 (58.2)	4.6 (27.2)	11.3 (41.5)	100.0 (53.8)	40.4 (56.9)	41.7 (60.1)	4.8 (26.9)	13.1 (47.3)	100.0 (60.8)	37.0 (65.8)	40.6 (66.7)	5.7 (33.7)	16.7 (55.2)
업종9	100.0 (2.0)	73.6 (3.4)	20.5 (1.0)	3.2 (0.8)	2.7 (0.6)	100.0 (2.7)	76.1 (3.4)	15.9 (1.2)	3.0 (0.9)	5.0 (1.3)	100.0 (1.7)	69.5 (3.0)	14.8 (0.7)	4.9 (1.0)	10.7 (1.3)	100.0 (1.6)	66.9 (2.8)	17.2 (0.7)	5.4 (0.9)	10.4 (1.1)	100.0 (1.1)	61.2 (1.9)	22.8 (0.7)	3.7 (0.4)	12.2 (0.7)
(가)산업	100.0 (39.1)	44.8 (40.7)	31.5 (30.6)	10.3 (50.5)	13.4 (59.8)	100.0 (29.7)	44.3 (38.5)	31.0 (24.8)	8.7 (43.0)	16.0 (30.5)	100.0 (20.1)	53.0 (26.3)	24.7 (13.4)	7.6 (17.8)	14.6 (21.2)	100.0 (16.1)	53.3 (22.4)	22.3 (9.6)	8.3 (13.9)	16.1 (17.3)	100.0 (11.4)	47.9 (16.0)	23.1 (7.1)	8.1 (9.0)	20.1 (12.6)
(나)산업	100.0 (31.5)	34.2 (25.0)	46.7 (36.5)	10.9 (42.9)	8.2 (29.6)	100.0 (29.9)	32.2 (25.7)	36.7 (33.3)	17.0 (43.1)	14.1 (41.7)	100.0 (27.1)	26.4 (17.7)	38.0 (27.7)	17.2 (54.0)	18.4 (35.9)	100.0 (28.5)	23.9 (17.9)	38.6 (29.5)	19.6 (58.2)	17.9 (34.3)	100.0 (26.7)	20.8 (16.3)	35.5 (25.5)	22.0 (56.9)	21.6 (31.5)
(다)산업	100.0 (27.4)	48.3 (30.8)	46.9 (31.9)	1.7 (5.8)	3.1 (10.0)	100.0 (37.7)	47.3 (32.4)	43.3 (40.7)	3.2 (13.0)	6.2 (26.5)	100.0 (51.1)	41.9 (53.0)	42.3 (58.2)	4.6 (27.2)	11.3 (41.5)	100.0 (53.8)	40.4 (56.9)	41.7 (60.1)	4.8 (26.9)	13.1 (47.3)	100.0 (60.8)	37.0 (65.8)	40.6 (66.7)	5.7 (33.7)	16.7 (55.2)
기 타	100.0 (2.0)	73.6 (3.4)	20.5 (1.0)	3.2 (0.8)	2.7 (0.6)	100.0 (2.7)	76.1 (3.4)	15.9 (1.2)	3.0 (0.9)	5.0 (1.3)	100.0 (1.7)	69.5 (3.0)	14.8 (0.7)	4.9 (1.0)	10.7 (1.3)	100.0 (1.6)	66.9 (2.8)	17.2 (0.7)	5.4 (0.9)	10.4 (1.1)	100.0 (1.1)	61.2 (1.9)	22.8 (0.7)	3.7 (0.4)	12.2 (0.7)

주: 1) 자료의 표준화, 연속성 미비 등으로 보정절차를 거쳐 산출된 통계치임을 밝힘. ()의 구성비는 권역내 업종별 비중을 나타냄.

2) 업종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업종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업종3: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및 가구(83년).

업종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인쇄 및 출판업/ 업종5: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업종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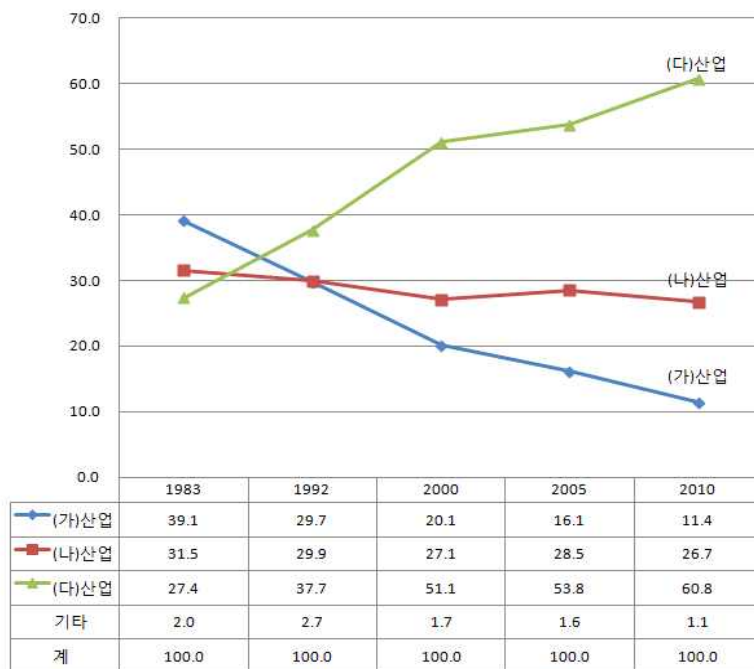
업종7: 제1차 금속산업/ 업종8: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업종9: 기타제조업(83년), 단 92년 이후는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 (가)산업: 노동집약적 산업(업종1,2,3,4의 합)/ (나)산업: 중화학공업(업종5,6,7의 합) / (다)산업: 신산업(업종8).

출처: 통계청(경제기획원),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각 년도; 2000년 이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이를 통해 우선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종의 구조 고도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개의 중분류 업종 중 업종8(금속가공제품 제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증가(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 대비 1983년 27.4% → 1992년 37.7% → 2000년 51.1% → 2005년 53.8% → 2010년 60.8%)한 반면 그 외 모든 업종의 연도별 비중은 하나같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업종8은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역이다. 반면 1970-80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중화학공업의 중심 업종인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 프라스틱 제조업’(업종5) 비중이 뚜렷한 감소 추세를(1983년 18.5% → 1992년 16.8% → 2000년 16.5% → 2005년 11.4% → 2010년 15.7%)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9개의 업종을 60-70년대 주도산업이었던 노동집약적 산업(가산업/업종1,2,3,4의 합), 1970-80년대 주도산업이었던 중화학공업(나산업/업종5,6,7의 합),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지식경제산업을 주도하는 신산업(다산업/업종8)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그림 4>참조).

〈그림 4〉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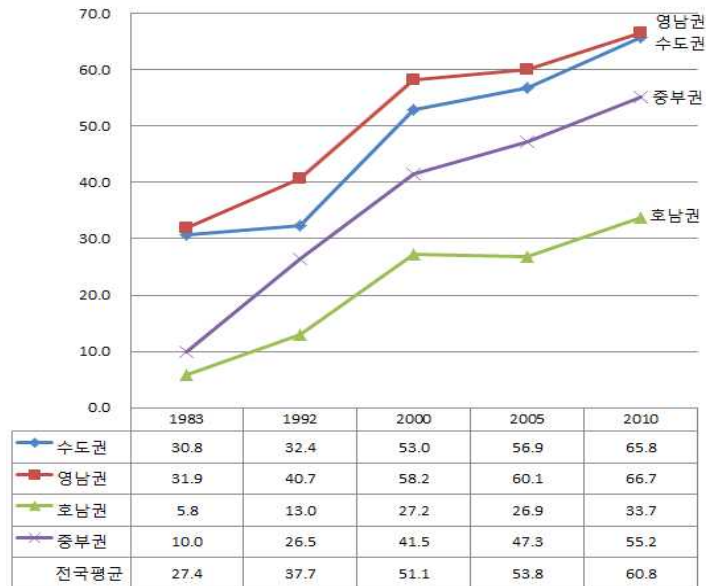


우선,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노동집약산업의 부가가치 점유율은 20여년 사이 39.1%(1983년)에서 11.4%(2010년)로 크게 감소하였고, 중화학공업 비중 역시 31.5%에서 26.7%로 감소하였다. 반면 신산업 부문(다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는 27.4%에서 60.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추이는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지방자치 실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가 신산업 부문의 지역별 차이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말해 준다.

이것은 신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권역별 점유율을 추세 변화를 대비시킨 <그림 5>에서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수도권/영남권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 반면 중부/호남권의 비중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경우는 1983년 30.8% → 1992년 52.4% → 2000년 53.0 →

2005년 56.9% → 2010년 65.8%로 증가했고, 영남권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31.9%에서 66.7%로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는 두 권역의 신산업화의 급진전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통계치 들이다. 호남 및 중부권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반전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다(<표 5> 참조). 궁극적으로 신산업 발전의 권역 간 차이가 오늘날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킨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권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총액 대비 신산업 비중(%)



V. 지역발전의 경로의존경향 및 미래 예측: 신산업 내부구성 차이

지역발전의 경로의존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역별 발전을 주도하는 업종의 비중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3단계 분석 절차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산업부문(대분류)별 발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산업의 성장의 차이에 의해 그동안의 불균등성장이 유발되었는가를 개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부문의 차등적 지역성장이 주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확인했지만(<그림 2>참조) 보다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제조업 부문의 영역(중분류)별 지역 간 발전의 추이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제조업은 하급기술(low-technology)부터 첨단기술(high-technology)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 의해 지역격차가 유발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불균등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 역시 제조업중분류의 업종8(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즉 신산업부문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했다(<그림 4>, <그림 5>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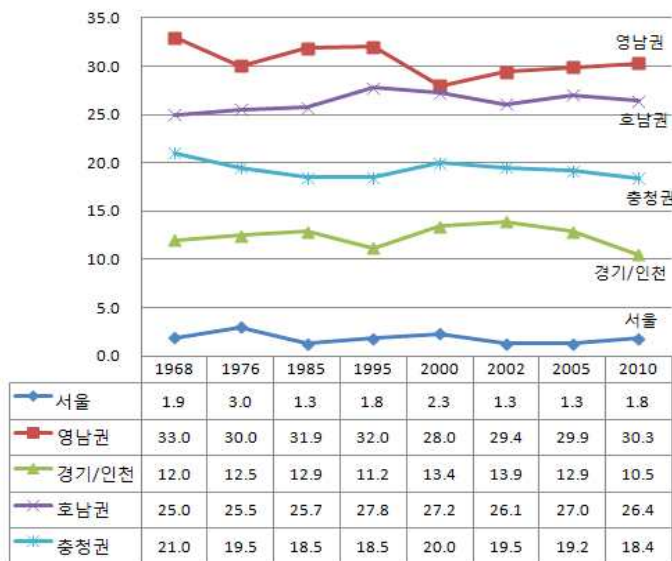
셋째, 신산업 주도 업종의 지역별 차등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신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총생산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그림 4>). 이렇듯 높은 비중을 주도하는 세부 주도업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들의 지역 내(권역내) 분포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경로의존 경향과 미래의 지역간 성장격차의 추이를 예측하기 위한 핵심작업이다.

1. 산업부문별 지역성장 격차

산업부문별 지역성장 격차는 지역별 GRDP 구성비의 비교를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권역별 시기별로 간명하게 파악해 보기 위해 <그림 6, 7, 8>을 제시했다. 우선 <그림 6>을 통해 농림어업부문 GRDP 지역 간 규모의 순위변동이 지난 반세기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지역불균등발전이 농림어업부문의 지역별 생산력 차이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광공업(제조업)부문 GRDP 규모의 권역별 순위변동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두 부문의 지역 간 격차의 크기에 의해 지역불균등발전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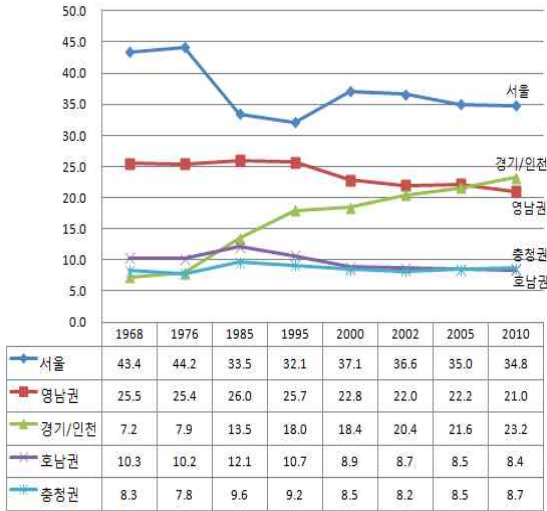
<그림 6> 농림어업부문 GRDP 지역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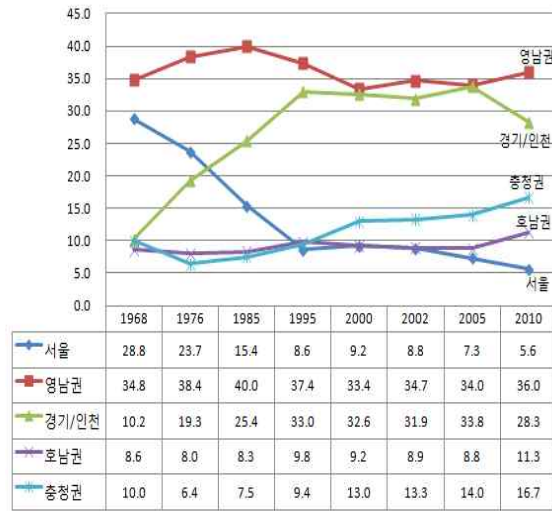
한편, 서비스업의 지역별 GRDP 차이는 <그림 7>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로부터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서울시의 높은 비중이다. 비록 1970년대 말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전국 대비 34.8%를 보일 정도로 매우 높다.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지역은 경기/인천지역이다.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전국대비 구성비가 1968년 7.2%에서 2010년 23.2%로 크게 증가하여 2005년 이전까지 서울 및 영남권에 비해 절대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2010년 영남권의 비중을 넘어섰다. 영남권은 196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20%대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호남권과 충청권의 2.5배에 해당한다. 서비스업의 추세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시 비중 감소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것은 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개인 서비스업의 사양화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사업(기업) 서비스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기술용역업, 정보처리업, 광고업, 연구소, 기업컨설팅 등과 같은 기업서비스업의 경우 서울집중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서울에의 집중도는 매년 증가 경향을 보인다(정준호·송우경, 1994: 141). 이것은

외관상 서울시 서비스업 사양화 경향이 진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 7> 서비스업부문 GRDP 지역별구성(%)



<그림 8> 광공업부문 GRDP 지역별구성(%)



광공업(제조업) 부문의 연도별 지역격차는 서비스업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그림 8>이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인지역의 급속한 비중 증가 속도는 놀라운 것이다. 1968년 10.2% → 2010년 28.3%로 동기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남권의 경우 증가경향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전국대비 35-40%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광공업부문의 GRDP 지역별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서울시 비중 감소 추세이다. 1968년도 전국 대비 서울시 비중은 28.8%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5.6%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비중 감소추세는 70-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지가상승, 성장관리, 교외도시화의 급격한 진전 등으로 야기된 서울시 공간구조재편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신산업 부문의 업종별 지역격차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의 경로의존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본위의 국가산업정책이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관철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대표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자동차, AV(audio-video), 의료정밀업종 등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들의 지역배열의 과정과 변화추세를 살피는 작업은 지역발전의 경로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신산업 부문은 보통 7가지 세부유형으로 나뉜다⁵⁾. <표 6>은 이들의 부가가치 생산총액을 권역별로 대비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업종에 걸쳐 수도/영남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률이 특히 높은 업종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5) 신산업 부문의 7가지 유형은 제조업 세부업종유형(업종 1, 2, ..., 9)과 구분하여 ‘신업종 1, 2, ..., 7’로 분류한다.

제조업'(신업종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신업종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신업종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신업종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같이 줄곧 40-50%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영남권 비중 역시 매년 30-40%선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 이들 업종은 미래첨단산업(지식기반 및 디지털기반 산업)의 핵심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수도권과 영남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불균등발전 현상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개 업종 중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IT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신업종4)이다. 그 비중은 1992년 26.3% → 2000년 35.9% → 2005년 41.7% → 2010년 41.2%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신업종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신업종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신업종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특히 신업종4의 공헌은 절대적이다. 2010년 경우 우리나라 신산업 전체 비중의 2/5(41.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 신업종6의 비중 또한 20%에 이른다. 궁극적으로 신업종4와 신업종6의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신산업 부가가치 총액의 약 60%에 이른다. 두 업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이와 같은 막중한 위상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지역간 차등배열 현상이 2000년대 불균등지역발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6> 신산업 부문의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지역별 분포

	1992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전국	수도	영남	호남	중부
계	100.0 (100.0)	47.3 (100.0)	43.2 (100.0)	3.2 (100.0)	6.3 (100.0)	100.0 (100.0)	42.0 (100.0)	43.0 (100.0)	4.7 (100.0)	10.2 (100.0)	100.0 (100.0)	38.0 (100.0)	43.3 (100.0)	5.0 (100.0)	13.6 (100.0)	100.0 (100.0)	37.0 (100.0)	40.6 (100.0)	5.7 (100.0)	16.7 (100.0)
신업종1	100.0 (11.8)	48.2 (12.0)	41.6 (11.4)	4.1 (15.5)	6.1 (11.4)	100.0 (8.1)	44.9 (8.6)	40.5 (7.6)	4.3 (7.3)	10.2 (8.0)	100.0 (9.8)	43.6 (11.2)	40.6 (9.2)	5.1 (10.0)	10.7 (7.7)	100.0 (8.7)	33.4 (7.8)	49.7 (10.6)	5.9 (8.9)	11.0 (5.7)
신업종2	100.0 (20.7)	46.7 (20.4)	44.5 (21.3)	3.6 (23.7)	5.2 (17.0)	100.0 (16.1)	41.8 (16.0)	41.1 (15.4)	6.3 (21.7)	10.8 (17.0)	100.0 (13.0)	22.3 (7.6)	54.5 (16.3)	8.9 (23.1)	14.4 (13.7)	100.0 (12.7)	40.3 (13.9)	43.4 (13.6)	5.2 (11.5)	11.1 (8.5)
신업종3	100.0 (8.8)	54.2 (10.0)	29.9 (6.1)	4.8 (13.3)	11.1 (15.4)	100.0 (7.4)	50.3 (8.9)	29.5 (5.1)	4.1 (6.4)	16.2 (11.7)	100.0 (6.5)	48.1 (8.2)	28.9 (4.3)	4.6 (5.9)	18.4 (8.7)	100.0 (7.5)	32.9 (6.7)	34.6 (6.4)	10.1 (13.2)	22.4 (10.4)
신업종4	100.0 (26.3)	63.2 (35.1)	25.5 (14.9)	1.7 (13.8)	10.6 (44.3)	100.0 (35.9)	56.8 (48.5)	32.4 (27.0)	1.7 (12.9)	9.1 (32.0)	100.0 (41.7)	48.3 (52.9)	35.5 (34.2)	0.8 (7.0)	15.4 (47.0)	100.0 (41.2)	49.3 (54.9)	25.9 (26.2)	1.5 (10.7)	23.3 (57.7)
신업종5	100.0 (2.5)	58.8 (3.1)	32.1 (1.9)	1.7 (1.3)	7.4 (2.9)	100.0 (2.2)	54.0 (2.8)	20.9 (1.1)	1.6 (0.8)	23.5 (5.1)	100.0 (2.3)	53.6 (3.3)	22.1 (1.2)	1.6 (0.8)	22.7 (3.9)	100.0 (2.3)	54.4 (3.4)	26.1 (1.5)	1.5 (0.6)	18.0 (2.5)
신업종6	100.0 (20.3)	41.8 (17.9)	51.3 (24.1)	4.5 (29.1)	2.4 (7.7)	100.0 (22.0)	28.1 (14.7)	51.2 (26.2)	9.0 (42.2)	11.7 (25.2)	100.0 (19.9)	31.5 (16.5)	44.1 (20.2)	11.5 (45.8)	12.9 (18.7)	100.0 (17.2)	28.3 (13.1)	45.0 (19.0)	12.0 (35.9)	14.8 (15.3)
신업종7	100.0 (9.7)	6.8 (1.4)	91.5 (20.4)	1.0 (3.2)	0.7 (1.1)	100.0 (8.3)	2.0 (0.4)	91.7 (17.7)	4.9 (8.7)	1.3 (1.0)	100.0 (6.8)	1.8 (0.3)	92.2 (14.6)	5.4 (7.5)	0.6 (0.3)	100.0 (10.4)	0.7 (0.2)	88.4 (22.7)	10.6 (19.3)	0.4 (0.2)

주: 신업종 1 : 금속가공제품 제조 / 신업종 2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신업종 3 : 전기장비제조업(2005년 이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신업종 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92년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제조)

신업종 5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

신업종 6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 / 신업종 7 : 기타 운송장비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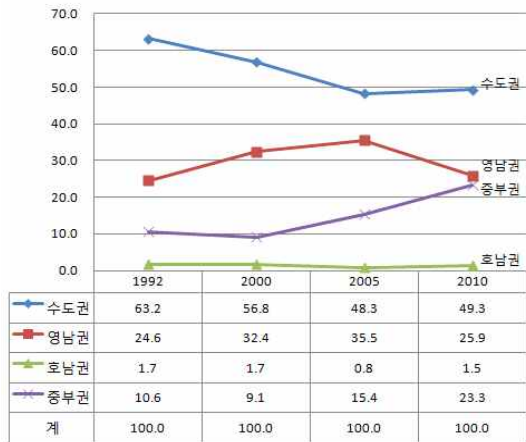
출처: 1) 1992년- 통계청, 「광공업센서스보고서」.

2) 2000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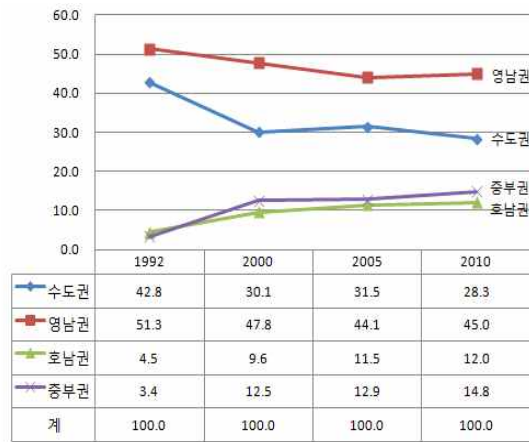
<그림 9>, <그림 10>은 우리나라 신산업 부분에서 비중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두 업종의 권역별 변화 추이와 차등 분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우선 <그림 9>를 통

해 2010년 기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업종(신입종4)> 부가가치 총액의 49.3%가 수도권에서, 그리고 25.9%가 영남권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비중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1992년 63.2% → 2000년 56.8% → 2005년 48.3% → 2010년 49.3%) 절대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 두 권역의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이 2010년 기준 75.2%에 이르고 있다. 이 업종의 총생산액의 3/4이상이 수도/영남권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신입종4의 중부권 비중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대목도 주목해 볼 일이다. 중부권의 IT신산업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은 2010년 기준 전국대비 23.3%로 영남권(25.9%)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남권 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2010년의 경우 전국대비 1%에 미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임이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신입종4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최근의 지역 간 성장격차의 상당 부분은 이 업종의 지역별 비중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신입종4) 부가가치 권역별 비교(%)



<그림 10>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신입종6) 부가가치 권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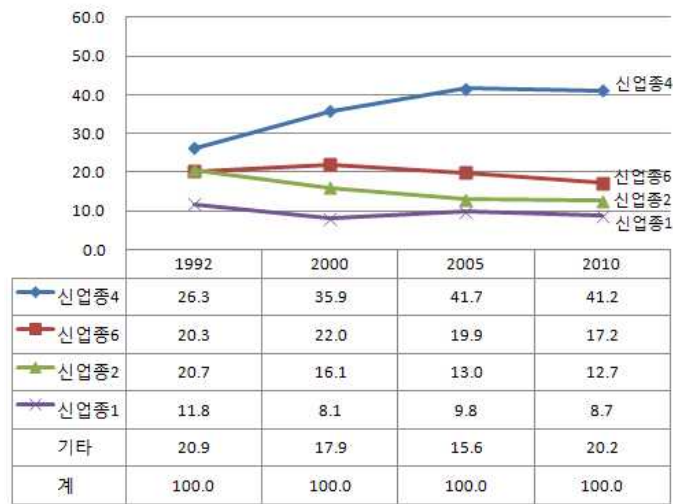
신입종6(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도 업종4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수도/영남권에서 전국 대비 3/4정도의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호남권의 비중이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해 볼 일이다. 신입종4와 신입종6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입종1(금속가공제품제조)과 신입종2(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무시할 수 없다(<표 6>참조). 물론 이들 두 업종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경향(1992년 32.5% → 2000년 24.2% → 2005년 22.8% → 2010년 21.4%)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산업 부문 부가가치 총생산액의 1/5이상이 신입종1과 신입종2를 통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생산 활동에서 두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신산업 주도 업종의 성장추세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경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최근(지방자치 이후)의 지역불균등발전 심화 현상이 상당 부분 4대 신산업 주도 업종(신입종4, 신입종6, 신입종2, 신입종1)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 준다.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상의 변화는 <그림 11>을 통해 잘 드러난다.

특히 신업종4가 차지하는 위상이 1990년대 이후 얼마나 크게 높아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무려 신산업 전체 부가가치 총생산액의 2/5(41.2%)를 신업종4가 담당할 정도로 그 위상은 절대적이다. 신업종6 비중 역시 만만치 않다. 매년 신산업 부가가치 총생산액의 약 20%를 이 업종이 담당하고 있다. 신업종1, 2의 영향력은 상대적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 비중은 여전히 높다. 궁극적으로 이들 4대 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 합계 비중은 신산업 전체 부가가치 총액의 79.8%(2010년 기준)를 차지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총생산액의 40%를 넘는 수치이다. 한국경제발전 과정에 미친 막중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의 지역 간 차등배열 현상이 불균등지역발전의 궁극적 원인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림 11〉 신산업 4대 주도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 변화추이(전국/%)



주: 신업종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신업종6 :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신업종2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신업종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렇듯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신산업 4대 업종들의 권역 내(지역 내) 비중과 위상의 추이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발전의 경로와 미래의 불균등 지역발전의 추세를 예측해 보려는 본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그림 11-1, 2, 3, 4>이다. 이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우선, <그림 11-1>을 통해 수도권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신업종 4)>의 전문지대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신산업 부가가치 총생산의 절반 이상(2010년 기준)을 신업종4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수도권의 신업종4 전문지대화 현상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추세(1992년 35.1% → 2000년 48.5% → 2005년 52.9% → 2010년 54.9%)로 진전되었다. ‘신업종4(IT신산업)의 성장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정책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러한 지향점이 앞으로도 결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전문지대화 현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발전이 전적으로 신업종4에 달려있고, 그러한 경로의존경향은 미래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반면 수도권의 신업종6, 신업종2, 신업종1 의존경향은 점차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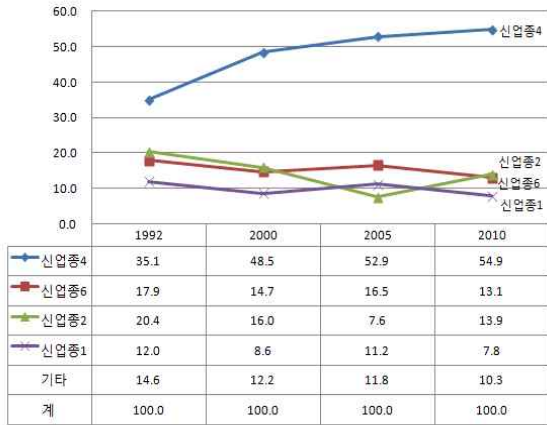
둘째, 영남권과 수도권이 뚜렷한 발전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과거 영남권 발전의 주도 업종이었던 업종6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신업종4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그림 11-2>). 영남권 내에서 업종4의 비중 증가 속도(1992년 14.9% → 2010년 26.2%)는 놀라울 지경이다. 영남권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신업종4 중심의 새로운 발전경로가 창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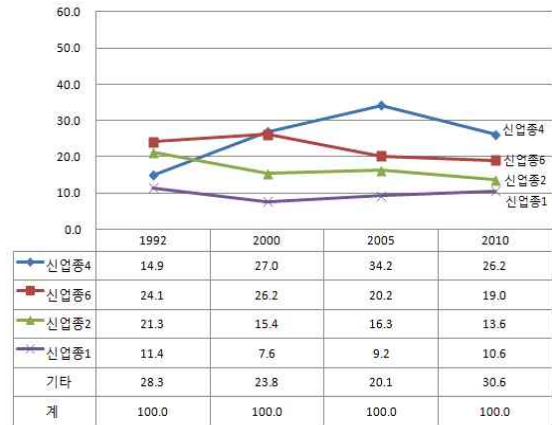
셋째, 중부권의 변화 또한 예사롭지 않다. 권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세부 업종 역시 신업종4로 나타나고 있다. 그 비중은 또한 매년 크게 상승(1992년 44.3% → 2000년 32.0% → 2005년 47.0% → 2010년 57.7%)하고 있다. 신업종4가 주도하는 새로운 발전경로가 중부권에서도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 산업이 중부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의 추동산업(선도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선급한 판단이다. 이 부분의 중부권 부가가치 총액이 <그림 9>에서 보듯이 여전히 전국대비 23.3%(2010년 기준)에 그치고 있을 뿐 76.7%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불균등지역발전이 갖고 있는 다중적 의미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호남권 내부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현재 호남권의 경제적 위상은 참으로 낮다. 2010년 기준 (1)GDP 대비 GRDP 비중 = 10.1%(<표 1>참조), (2)광공업부문 GRDP 전국대비 비중 = 11.3%(<그림 8>참조), (3)제조업부문 부가가치총생산액 전국대비 비중 = 10.4%(<그림 3>참조), (4)신산업부문 부가가치총생산액 전국대비 비중 = 5.7%(<표 6>참조) 등의 통계치가 이를 웅변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신산업 내부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싹을 의미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신업종6(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변화 주도의 떡잎이다. 전국 대비 부가가치 생산액 비중이 1992년 4.5% → 2000년 9.6% → 2005년 11.5% → 2010년 12.0%(<그림 10>참조)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불모지대 호남권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내 비중 증가율은 더욱 놀랍다. 1992년 29.1% → 2000년 42.2% → 2005년 45.8% → 2010년 35.9%로 꾸준한 상승추세이다(<그림 11-3>참조). 이것은 군산의 GM대우 자동차 및 전주 현대차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지역내부에서는 이미 신업종6을 제조업의 황무지, 호남권을 변화시킬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극적 반전 추세가 다른 어떠한 업종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채택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신업종6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경로가 호남권 내부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그림 11-1〉 신산업 4대 주도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 권역 내 비중 변화추이(수도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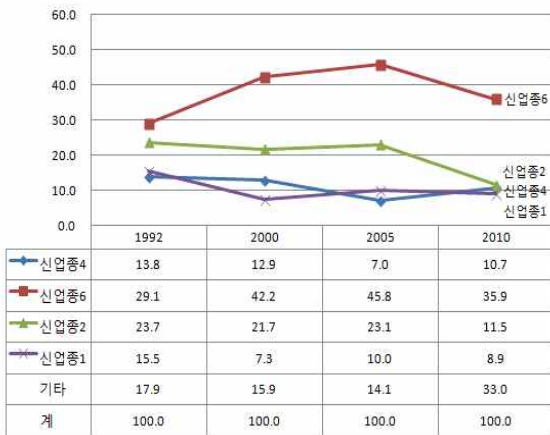


〈그림 11-2〉 신산업 4대 주도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 권역 내 비중 변화추이(영남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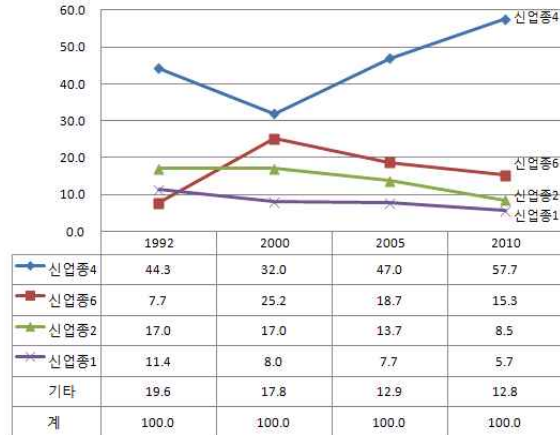


주: 신업종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신업종6 :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신업종2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신업종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림 11-3〉 신산업 4대 주도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 권역 내 비중 변화추이(호남권 /%)



〈그림 11-4〉 신산업 4대 주도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 권역 내 비중 변화추이(중부권 /%)



VI. 결 론 : 요약 및 함의

지역 간 성장격차는 국가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성장의 주도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신산업(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바뀌면서 이 분야의 부가가치 생산총액의 지역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의 성공이 지역 간 성장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시기적으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들

러싼 불협화와 갈등이 보다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기술 통계치를 통해 앞서 확인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지향점과 주도업종(특히 신산업 부문의 업종4와 업종6)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주된 집적지인 수도권/영남권에의 투자규모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고, 그 결과 다른 지역과의 발전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는 비극이다. 이를 둘러싼 지역대립구도가 보다 심화될 것이리라는 가설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규자본의 투자 장소 및 방법은 다음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1) 어떠한 산업 및 업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정부 및 기업의 투자우선순위)
- 2) 투자 이후 잉여생산(이익산출)까지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리는가(자본의 회임 기간)
- 3) 유사한 자본, 기술, 시설이 어느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가(지역 내 유관자본 및 기술 집적 정도)
- 4) 도로, 항만, 수자원공급시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주택, 병원, 문화시설 등의 사회적 비스시설 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지역 내 집합적 소비수단의 집적정도)

후진국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완전히 무시된 채 오직 ‘정치적-정실적 판단’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히 나타났었다. 오래전에 발표된 조사결과 이기는 하지만 석현호(1997: 220)의 연구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 가까이가 중앙정부 정책이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위해 결정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권자들이 자신들의 편견이나 감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이 72%에 달한다. 더구나 전체 국민 80%가 정책결정권자들이 외부압력이나 ‘빡’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성장정치가 종식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성숙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투자의 공간적 장소와 방법도 합리적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그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합리적 투자배분에 따른 불가피한 양적 불균등지역발전 문제)를 ‘정치적-정실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들의 잘못된 의도와 시각을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길은 ‘지역발전을 양적 성장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질적 성장 및 변화의 가능성으로 파악하려는 시각과 이론’을 정립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필자는 ‘특화된 전략에 따른 지역발전의 새로운 경로 창조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발전론적 시각’이라고 개념화하고 싶다. 예컨대, 지역의 문화, 역사, 생태, 환경, 그리고 특화된 서비스 자원을 통한 ‘느린 성장전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략은 모두 ‘지역발전의 새로운 경로창조’를 위한 ‘작아 보이지만 큰 시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 연구는 단지 제조업 내부에서 지역을 주도할 새로운 경로 창조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국가산업구조 고도화전략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었다. 필자는 구체적으로 신산업 부문 7개 세부업종의 지역별 성장추세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했다. 이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업종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신산업 성장을 주도한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신산업 업종4)>과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신산업 업종

6) >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지역배열의 차이가 불균등지역발전의 주된 원인임이 밝혀졌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논쟁거리인 수도권/영남권의 과대성장은 이들 두 업종의 압도적인 비중 증가의 결과이다. 특히 산업종4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2010년 기준 수도권 신산업 부가가치 총생산액의 절반 이상(54.9%)을 이 업종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이다. IT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부가가치 성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는 국가 경제정책이 변하지 않은 한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산업종4의 영향력의 증대 경향은 영남권에서 보다 강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두 권역에서 <지역발전 주도업종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각의 발전경로가 갖는 의미는 상이하다.

수도권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종4가 내부 발전의 통로 역할을 담당해 왔고, 비중 또한 크게 상승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기존 발전경로의 강화(경로의존경향의 심화)현상으로 해석함이 옳다. 그러나 영남권의 경우는 기존의 성장주도 업종이었던 산업종6의 영향력을 산업종4가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종4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발전경로의 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정도는 미미하지만 중부권에서도 이러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종4의 역내 비중이 2000년 이후 10% 포인트 이상 높아져 2010년 경우 무려 57.7%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견상 새로운 발전경로가 중부권에서도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 대비 신산업 전체의 절대 비중(2010년 기준 16.7%)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중부권의 중추적 발전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는 지켜 볼 일이다.

한편, 호남권에서도 내부적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남권의 경제적 위상은 매우 낮다. 그러나 신산업 부문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다. 산업종6(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변화의 주역이다. 이 업종의 전국 대비 호남권 부가가치 총생산액 비중은 2010년 기준 12.0%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불모지대로 각인되어 왔던 호남권 내부에서는 엄청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극적 반전의 추세를 다른 어떠한 업종에서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내부에서는 이미 산업종6을 신산업의 황무지, 호남권 전체를 변화시킬 성장 동력(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지원책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이것이 호남권의 새로운 발전경로로 성장할지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경우에는 산업종4 중심의 기존 발전경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는 산업종4 중심의 새로운 발전경로가 창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부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각각 산업종4와 산업종6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로의 부상 가능성이 엿보이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중부/호남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로가 지역 간 불균등발전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조정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1995. “지역발전이론의 전개과정과 최근 동향.”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새로운 공간환경론의 모색』. 한울.
- 김영정. 1994. “한국사회의 자원동원과 자원분배 구조.” 한국사회학회 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의 지방화』. 나남.
- _____. 1998. “한국 지역발전격차의 실태 및 균형발전 전략의 모색 : 지방주도 특성화 발전전략 구상.” 호남사회연구회 편 《호남사회연구》 4,5합본호. 한울.
- _____. 2002. “한국 지역사회학의 성립과 발전.” 지역사회학회 편. 《지역사회학》 4(1).
- _____. 2003a. “지역발전과 ‘성장정치’.” 지역사회학회 편. 《지역사회학》 4(2).
- _____. 2003b.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동향과 전망》 59.
- 김영정, 소순열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 공간, 경제, 문화』. 한울.
- 박양호. 2003. “신뢰사회를 위한 총체적 지방분권 모형.” 성경룡·박양호 외.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 박양호 외, 1998.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 박영수. 2006. “경로의존성과 체제전환.” 산업경제연구원. 《산업경제연구》 19(1).
- 박종화. 2009. “지역산업정책 형성과정의 경로의존성 : 대구권 산업발전로드맵 수립과정의 경험.”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61.
- 석현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 성경룡. 2003. “분권·분산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 성경룡·박양호 외.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 정준호·송우경. 1993. “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서울연구』. 한울.
- 최병두. 1994.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 편 《대한지리학회지》 29(2).
- 최영출, 양덕순, 최외출. 2007.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이슈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도시행정학회 편. 《도시행정학보》 20(2).
- 통계청. 1993. 「도내총생산추계결과」.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80. 「지역생산예측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1993.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녹두.
- 황희연, 강현수. 2008.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정책을 위한 제언.” 산업연구원 편. 「KIET News Letter」 (2008. 1. 31).
- Martin, R. and P. Sunley, 2006. “Path Dependence and Regional Economic 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6. Oxford Univ. Press.
- Garud. R. and P. Karnoe eds. 2001. *Path Dependence and Creation*. London, Lawrance Erlbaum.